국감장 곳곳 '대장동' '고발사주' 충돌

여야, 이재명 증인 출석 신경전
지역 국회의원 고발사주 추궁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을 맞은 13일 상임위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감장 출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임위별로 '고발사주'와 '대장동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다음주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 국감에 출석을 예고하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갈등이 더욱 증폭하는 양상이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는 이틀째 이 후보를 비롯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경기지사인 이 후보가 핵심 증인이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 요구'라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이 대장동 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증인을 불러야 한다며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에 초기자금을 댄 것이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기원 씨로, 420억원을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댔다"며 최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또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경찰 내부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다"면서 김씨의 증인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이재명 후보가 이미 국토위와 행안위 국감에 나가기로 했다. 도대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무위 국감이 무슨 연관이 있나"라며 "(야당이) 국감을 팽개치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김희곤 의원은 "40여명의 대장동 관련 증인을 민주당에서 한 명도 받아주지 않고 있고 꼬리에 불과한 최기원, 킨앤파트너스 관련 사람들만 받아줄 수 있다고 한다"며 "제가 요구한 증인은 이재명, 유동규, 이한성, 정진상 등 핵심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의 대구시·전북도 대상 국감에서는 오는 18일 경기도청 국감을 앞두고 자료 요구를 둘러싼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 5명이 당 차원의 경기도청 및 성남시청 항의 방문을 위해 국감에 불참하자, 여당 의원들이 무리한 자료 요구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장동 관련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고, 성남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이런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면 (야당이) 그런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피감 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기관과는 트러블이 없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독 경기도만 왜 이러나"라며 "특히 대장동 비리 관련 요구 자료는 76건 중 단 한 건도 받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의 각종 의혹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는 없고, '고발사주'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문호승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견제·연대 줄타기

탈락 주자에도 구애

국민의힘 '4강' 대권주자들의 이합집산에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추켜세웠고, 홍준표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윤석열 검증'에 공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 후보 간 단일화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SNS에 별도의 글을 올려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는 원 전 지사를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을 "흠결 있는 후보"라고 규정하면서도 원 전 지사에 대해선 "개혁·합리적 보수에 공감하는 후보"라며 긍정 평가를 내놨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각을 세우며 유 전 의원을 지원사격하는 듯한 흐름이다. 유 전 의원이 지난 11일 TV 토론에서 윤 전 총장의 '주술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과 관련, 홍 의원은 SNS에서 "허무맹랑한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국사(國師)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유 전 의원 편을 들었다.

일부에서는 두 사람이 지지율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을 넘어서기 위해 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측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유 전 의원 측은 "토론회 과정에서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공조를 할 순 있지만 인위적인 단일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고, 홍 전 의원 측은 "당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요구가 나오면 몰라도 먼저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들 4강 주자는 1,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주자들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우선 윤 전 총장은 외교통 박진 의원과 호남 출신으로 'DJ 적자'를 자임하는 장성민 전 의원을 영입한 데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최 전 원장 본인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재형 캠프 출신 김기철 공보팀장이 이미 윤석열 캠프에 공보부실장으로 합류한 상태다.

홍 의원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손을 맞잡은 데 이어 이날 이언주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2차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하태경 의원은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에게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달빛내륙철도 예타면제사업 선정돼야"

이형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달빛 내륙철도 사업의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롭게 반영됐지만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넘기 힘들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부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하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광주와 대구가 합심해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구시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면서 "양 자치단체가 그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석탄채굴기업 투자 기준 제시 못해

김원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13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채굴·발전기업에 투자를 제한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 제시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처음 ESG를 도입한 후, 2020년 국내주식 펀드에 ESG 57.2%를 달성했다면서, 2022년까지 ESG 투자를 50%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채권과 해외 주식 등을 합한 지난해 연기금 총 규모 834조원과 비교하면, 국내주식 펀드 101조원은 12.1%에 불과했다.

또한 2019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석탄채굴·발전기업에 투자를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성물질 함유 '피마자박' 광양항에 대량 보관

주철현 국회의원

독성물질을 함유한 '피마자박'이 광양항과 울산항에 여전히 대량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 중 올해 9월 기준 수입 피마자박 반입 현황을 보면 광양항은 7만4495톤, 울산항은 1만7401톤이다.

피마자박은 독성물질인 리신 함유량이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해 대기 중 노출되면 0.001g 정도의 소량으로도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피마자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자 지난 7월 26일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4대 항만공사 등에 항만야적장 내 산적보관 중인 피마자박은 7월 말일까지, 항만 창고에 산적보관 중인 피마자박은 8월 말일까지 반출 조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광양항은 2만3천여톤 울산항은 1만5백여톤이 해수부 행정명령 이후에도 항만 내 여전히 보관 중이다.

해경 조난 구명조끼 250톤 승조원에만 지급

윤재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1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경이 조난 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RFID 구명조끼'를 250톤 이상 경비함정 승조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선주파수인식이라고 불리는 'RFID'는 실족을 비롯 해난사고 시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담긴 구조신호를 최대 15km 밖에서도 보낼 수 있어 조난 시, 승조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품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훈령에는 RFID구명조끼 지급 대상을 250톤 이상 경비함정으로 제한하고 있고 승조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별 정원 70%에게만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1) 40평(전용) 2억5천(융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5천(융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융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중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신용